

오피니언

월/요/광/장

윤병갑



지난 21일 11시, 광주우체국 앞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 호남지역본부와 광주전남시민단체 회원들이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전기절약 캠페인을 펼치고 있었다.

이어 오후 2시, 낮달없는 사이렌 소리에 놀란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민방위훈련은 15일이 아닌가. 지금껏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인식되어온 민방위훈련은 북으로부터 공습, 화생방전, 화재대피 훈련이 아니라 전기절약을 위한 정전훈련이라니.

지난해 9월 15일의 블랙아웃, 즉 대규모 정전상태를 우리는 경험했다. 그날 예고 없는 순환정전으로 전국 162만 가구가 620억 원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 그뿐인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고, 병원의 각종 장비가 작동을 멈추고, 교통신호가 꺼져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따라서 이번 정전훈련은 우리로서는 마땅히 다가올 위협에 대한 것이다. 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최

소 400만KW의 예비전력이 필요한데, 12년 만에 가장 무더웠다는 19일에는 예비전력이 330만KW로 떨어져 비상조치의 하나인 관심단계를 발령해야하는 상황까지 이른 셈이다.

이를 인식하여 캠페인에 동참하고 민방위훈련에 참여하면서도 필자는 약간의 서글픔을 느낀다. 매년 우리는 이런 일을 되풀이해야 하는 건가. 전기제품은 그냥 무조건 꺼야만 하는 건가? OECD 그룹에 들어간 지도 왜냐고, 얼마 전부터는 G20이라는 명예의 전당에도 들어갔다는 데 에너지 절약방법에 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니 말이다. 에너지 절약효과가 크다고 들은 전자제품은 그 얼마며,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이 기존 발전소 이외에도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 얼마나 늘었는데 해마다 전기가 부족하다며 이열치열, 이한치한을 외치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태양열,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은 전기 소모가 적고, 친환경적 이어서 그런 시설을 갖춘 건물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왜 모든 건물은 천연열로 불을 끄고,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어야 하는가. 고효율설비, 친환경설비를 활용하는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가 똑같이 온도규제를 받는다면 누가 과연 그러한 설비를 설치하려고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 전기

전기중독 사회

는 어렵다고 하는데 전력소비량이 전년도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가게, 기업, 자영업 모두가 전기요금을 올리면 가게와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하소연만 해야 하는가. 전기의 원료인 석유보다 전기라는 제품이 비싸다는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 지고 있는 것일까.

작년 9월 15일, 전국적으로 순환정전이 일어났을 때 일부에서는 예비력을 확보하여 공급의 안정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외치고, 다른 한 편에서는 특정한 시기에 수요가 몰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해법을 주장했다. 또 한편에서는 전기중독에서 헤어나는 것만이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하였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필자는 혹시 우리는 모두가 전기에 심하게 중독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100원어치를 팔면 12.60원을 손해 보는 구조, 현행 전기요금 또한 국제적으로도 일본 대비 40%, 미국 대비 7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전기요금에 석유, 석탄 등 1차 에너지값 보다 싼 비정상적인 상태를 인지해야한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의 전력소비 증가율이 미국 1.7%, 일본 -1.9%인데 반해 우리는 30.6%이나 된다는 점을 인식한 후에라도 일상생활을 전기에만 의존한다면 이것은 분명 전기에 중독된 것이다.

알고올 중독이 치유되지 않으면 삶에 파탄이 생기는 것처럼 전기중독이 빠르게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은 어느 순간 나라에 빠질 위기에 몰리게 되는 현실이다. 왜냐하면 전기는 전기처럼 빠르게 전국적으로 공급이 멈출 수도 있으니까.

<한국생산성본부 호남지역 본부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주기적인 화물연대 파업 이대론 안된다

화물연대가 표준임제 폐제화,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25일부터 집단운송거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광주에서는 이날 오전 11시 기아차 광주공장 앞에서 1500여 명의 노조원이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2003년과 2008년에 이어 4년만에 화물연대가 운송거부에 들어감에 따라 물류 차질로 인해 기아차와 삼성전자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등 지역 업체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2008년 화물연대의 장기 파업으로 물류대란을 겪으면서 삼성전자 광주공장은 19년만에 처음으로 가동률 중단했고, 기아차와 금호타이어 등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또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들은 물론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반출입량도 크게 떨어져 사실상 마비현상을 빚었다.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은 주요 항만과 물류기지를 대상으로 비노조원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자치 위기국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국내의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 정부와 화물연대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당부한다. 물류대란이 일어났던 국가 신인도와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내경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모 아니면 도식'의 파업 강행과 비조합의 운송방해 등이 이어진다면 국민적 비판을 면기 어렵다. 정부도 2008년 운송구조 개선과 표준요금제 폐제화, 화물차 감차 등을 화물연대와 합의해 놓고도 지키지 못한 것은 분명 책임이 크다. 정부는 엄정 대응만 내세울 게 아니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며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차체에 물류시스템의 개선 등 선진 물류체계를 서둘러 구축해 파업의 발미를 뿌리 뽑아야 한다. 또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 물류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단체장 절반이 '집 놔둔채 관사' 생활이라니

광주·전남지역 24개 광역·기초 단체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곳에서 단체장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예산남비 등을 이유로 '원칙적 폐지'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처사여서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전남 경실련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 등 광역 2곳을 비롯해 목포, 광양, 강진, 곡성, 무안, 보성, 영광, 영암, 완도, 진도, 함평, 해남, 화순 등 도내 13개 시·군이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도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사 운영비용도 만만치 않다. 경실련은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의 관사 관리비는 각각 1750만 원, 2280만 원으로 총복의 2배, 인천의 8.5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관사 운영 지자체 대부분의 재정자립도가 도내 평균인 17% 보다

낮은 10% 안팎에 그치고 있을 정도로 재정여력 열악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 평균 8.1%, 강진 9.3%, 무안 10.2%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부가 지난 2010년 예산남비, 열악한 지방재정 등을 이유로 원칙적 폐지 등 관사 개선 방안을 시달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관사를 매각, 타용도 사용 등을 고려 중인 곳은 광양과 곡성, 해남, 화순군 등에 불과하다. 일선 시·군 등 나머지 9곳은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으로서 '분수를 모르는 처사'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지자체들이 낮은 재정자립도 등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관사를 유지하거나 부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윤배만이 아니라 바이다. 지역 출신인 단체장도 말하는 현실에서 굳이 집을 놔두고 별도의 관사를 운영,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지자체들은 이제라도 불필요한 관사를 폐지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쓰는 게 옳다.

법조칼럼



고상영

"또 법정에 나와야 합니까?","판사님, 빨리 판결해 주세요.", "판사님이 어떻게 결론 내려주시든 저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필자가 민사 소액재판 업무를 담당했던 때 당사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지금은 담당하는 사건의 액수가 조금 커져 전문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법정에서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이다.

어느 통신 회사의 광고 카피처럼 한국 사람들은 성미가 급해서일까? 아니면 어느 소설가의 날카로운 풍자처럼 관사는 사건을

신속해야할, 하지만 신중해야할 재판

늘어 조지기 때문일까? 물론 '돈 많이 들고 오래 끄는' 민사소송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겠지만, 무작정 빨리 끝내기에는 판결의 효력이 가법지는 않은 것 같다.

얼마 전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낸 탄원서와 유사한 답변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 금융기관이 9년 전에 승소한 판결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다시 소를 제기한 사건이었는데, 이전 재판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피고는 필자에게 뜻밖에도 불판으로 자신의 사안이 담긴 답변서가 제출해 긴장하면서 기록을 검토하게 됐다.

피고는 자신이 차량 할부금을 내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없고, 선배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서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전 사건에서 소장을 받고 선배에게 항의하니 선배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문제를 조만간 해결

해 준다고 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 이러한 해명 뒤에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호소와 과거에 대한 후회도 이어졌다.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이전 판결로 월급을 압류해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썼다. 그는 이전에 패소 판결을 받았을 때는 대학교 재학 시절로 별다른 재산도 없고 해서 판결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 괴롭힐 줄 알았다면 이전에 제대로 소송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후회로 답변서를 마무리했다.

사실 필자는 피고가 낸 답변서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해서 이전과는 다른 판결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을 공부한 사람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이전 판결로 금융기관이 피고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인

적 사항이 도용됐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이상 실득력이 없다.

피고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뒤집기 힘들다는 법률상담을 받았던 것일까? 법정에서 피고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지만 피고는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이번 사건에서도 다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됐다.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판결이 효력이 가법지 않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고, 필자는 소송당사자들에게 법률상담을 받아 보고 서편이나 자료를 더 내보라고 하는 등 이전보다 더 신중하게 재판에 임하게 됐다.

하지만 사람들은 신중한 재판보다는 신속한 재판을 더 원하는 것 같다. 당사자들은 관사가 자료 제출을 촉구하면서 변론을 속행하면 대부분 못마땅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다. 승소에 자신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재판부가 판결이 판결을 미루는 걸까? 사람들은 판결이 확정되면 앞질러진 것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매주 법정에서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하는 사건인지 아니면 신중한 재판을 해야 하는 사건인지 고민을 한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 판사>

기고



정반석

21세기를 지식정보화, 글로벌시대라 하며 변화와 성공을 꿈꾸는데, 사회는 병들어만 가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들은 지난 세월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보았는 데도 비전은 잃어가고 어두워지는 것만 같다. 우리의 생활이 윤락해졌지만 사회는 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냉랭해지는 모습을 보며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 우리의 교육이 잘못되지 않았나 반성해 보게 된다. 또 우리 사회의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현상도 사회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날 때 우리는 교육보다는 여러 가지 미봉책에 눈길을 쉽게 준다. 바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다. 교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

인성교육의 모글리 현상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지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교육받지 못한 늑대 소녀, 최근 러시아에서 발견된 7년간 새장에 갇혀 산 반야 유인, 5년간 개와 함께 방치된 나타사의 삶을 보면 교육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훈련되지 않은 펭시는 전쟁에서 무의미한 것처럼 교육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꽃이 피고 나뭇잎이 무성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교육은 이처럼 큰 효과를, 희망을, 유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하여야 하는가? 지금 세계는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많은 것들이 가능하고 얻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지만 선택이 중요하고 가치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 잘못 선택하면 순간에 넘어지고 나도 타인도 병들게 된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약자

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것만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많은 새로운 교육방법과 교육상품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도 깊은 철학을 가지고 취사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본질적인 교육의 방법을 다양화시켜 교육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획일적인 교육은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된다. 자율성과 창의성이 없는 교육은 발전하지 못하고 변화의 주지 못해 결국 퇴보하게 된다. 어떤 시장으로 가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지는 결국 교육에 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세상에서 바른 것을 볼 수 있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꾸준한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획일적인 기준으로 단점만 부각시키는 교육을 한다면 아이들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마음에 미움과 시기로 상

처받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회는 다른 형태와, 강도 높은 폭력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학생 각 개인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좋은 위치를 찾으면서, 인성을 평가하고 보는 데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의 방향에서만 보고 평가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 나의 목은 고정 관념, 획일적인 기준을 내어 버리고 사람의 눈으로 서로를 섬기고 칭찬해 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춤을 추며 미래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늑대소년, 반야 유인, 나타사 등 태어나서 인간적인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사람과 동물의 중간 정도로 자라나는 것을 '모글리 현상'이라고 한다. 단순히 물리적인 상황을 벗어나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충분한 사랑과 관심, 칭찬을 받고 있는가? 인성교육에 있어서 무관심에 방치되어 사람과 동물의 중간정도 어느 쪽에 있지는 않는가? 우리 삶의 본질은 정치적 경제도 아니다. 참교육, 참사랑만이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다. <연제초등학교 교장>

맹신하기 쉬운 나노제품 안전성 검사 철저해야

건강과 제품의 특징을 유난히 강조하면서 광고 홍보물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은 무엇일까.

미네랄, 키토산, 나노, 적외선, 바이오, 비타민 등 부지기수로 많다. 물론 소비자들은 이런 말 전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업체들은 이런 성분 자체가 뭔가 엄청난 효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소비자를 역시 이런 선전문구가 들어가면 뭔가 좀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게 사실이다.

요즘 그래서인지 부쩍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나노'라는 말이다. 나노기술이 뭘인지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물질을 10억 분의 1m 크기로 미세하게 가공하는 기술인데 이걸 이용하여 항균, 침투, 흡수효과가 증가할 수 있어 공산품,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나노기술이 응용할 수 있다고 돼있었다.

나노기술을 적용했다는 제품이 검증하고 이를 홍보하거나 사고 파는 게 많은데 이런 과언 무엇인지, 어느 제품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과연 부작용이나 건강 없이 항상 우리 인체에 유용하게만 작용

을 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또한 이것이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적절히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안전성 가이드라인은 국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소비자 보호 기관에 이 나노제품을 관리하는 제도적 방안은 있는지 하는 것들이다.

시중에서 흔히 듣고 보는 오픈마켓, 흡수필, 대형할인마트에는 나노제품이 팔리고 있다. 휴대폰을 비롯한 컴퓨터용품, 각종 가전제품, 화장품, 미용제품, 완구와 의류 같은 데까지 안 퍼져 있는 곳이 없을 정도다.

그중에서도 인체에 직접 닿는 의류나, 화장품 같은 것에 들어가는 나노 성분은 과연 유해물질은 없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나노라는 게 직접 접촉했을 경우 아무 탈이 없는지도 소비자로서 궁금하고 답답하다.

한 나노식품의 광고내용을 보니 "세계 최초 건식나노 분쇄기술로 제조, 인체흡수율이 뛰어난 제품"이라며 건강기능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나노 물질은 인체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나노 물질과 나노제품에 대해 시장유통 전승인을 받거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무척 미흡하다.

소비자 당국은 나노제품에 대해 그 위험성을 알리고 소비자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 맹신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할 것이다. ▲신재민·목포시 수감동

無等鼓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지 쥐고/ 늑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白髮) 막대로 치렀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고려 말 유학자인 우탁(禹倬)의 시조다. 늑을 인위적으로라도 막아보려는 솔직한 심정을 노래했다. 연작 3수 가운데 "이따금 꽃발을 지날 제면 죄지는 듯 하여라"라는 구절에서는 백발이 성성을 탐하는 죄책감이 진솔하게 묻어났다.

춘향전에도 '백발'이 나온다. "오는 백발 막고, 좌수에 가지 들고(중략) 가는 홍안(紅顔)도 물아와, 귀밑에 살 잡고 검은머리 백발 되

니..." '역동선생'(易東先生·우탁의 별칭)의 시조를 본뜬 듯하다.

창작연대 미상의 가사 '노인가'(老人歌)는 "---어와 참초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덧없이 가는 세월 넌들 매양 젊을소나..."라고 한탄한다.

노화를 막아보려 하지만 더욱 빠르게 찾아오는 세월의 무정함을 노래한, '탄

로가'(歎老歌)들이다.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노인의 나이는 얼마나 될까. 아마도 50세를 넘지 않았을 게다. 1930년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30대에 그쳤고, 1950년대까지만 해도 50대에 머물렀다. 반면 현재는 81세에 달한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2045년에는 평균 수명이 아닌

노인(老人)



'평균 연령'이 50세에 달해 세계 최고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도 나왔다. 서울시가 '노인'을 대체할 명칭을 찾고 있다.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상되는 '노인' 대신 밝고 희망차며, 공경의 뜻을 담은 명칭 공모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83.7%는 70세를 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100세 시대'가 촉박인지, 재앙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탄로가' 소리가 높아지기 전에 노인에 대한 정의와 복지 대책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성심이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정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신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